

제426회 국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7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3.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리박스쿨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5.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2  
가. 교육부 소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 27
3.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8
4. 리박스쿨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28
5.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 28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을 상정하고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오늘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출석 거부 사유서가 ‘지난 6·4 사의를 표한 이후 국정 연속성 차원에서 국무총리직무대행을 수행 중’ 이렇게 간단하게 양해 요청 사유서를 보내 왔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국회 오셨을 때 그때는 국회 본회의장 제일 앞줄에 계셨는데, 교육부장관의 자격과 총리 대행의 자격으로 앉아 계셨지만 그때는 본회의장은 나오시고 오늘은 국회 교육위 상임위에는 불출석하시는 것, 어떤 구분으로 본회의장은 참석하시고 우리 국회 상임위는 참석을 안 하시는지.

특히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회부총리의 권한도 있으신데 지금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문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외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교육부장관이시지만 현재도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교육 관련된 현안을 그때 꼼꼼히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안 챙기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지난 정부 때 부족했던 것들이 있으면 잘 수습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박스쿨 관련해서 청문회 개최를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해 주셨는데 아마 청문회가 실시됐을 때는 우리 민주당의 총리가 임명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청문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또 리박스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셨던 점에 대해서 잘 해소시켜 주시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교육부 소관

(10시07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소비 진작, 민생 회복 및 국가 성장동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 확충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AI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경정을 실시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교육시설 투자 확대로 교육의 질 제고 및 경기 진작에 기여하고 AI 분야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료 10쪽,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수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회계·기금별 지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조 4334억 원 감액된 102조 5525억 원입니다. 예산은 2조 4334억 원 감액 편성하여 95조 7719억 원이며 기금은 변동 없이 6조 7805억 원입니다.

12쪽,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조 4334억 원 감액한 95조 8663억 원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이 2조 1억 원 감액되어 79조 3806억 원이며 고등 교육 부문은 4333억 원 감액된 15조 2333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조 1023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150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조 5661억 원, 보건 분야는 120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13쪽, 부문별 편성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은 18억 6700만 원 감액한 37억 62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조 9273억 원 감액한 67조 7323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168억 원 감액한 7269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56억 원 감액한 2423억 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336억 원 감액한 1조 338억 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149억 원 감액한 5459억 원입니다.

다음,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22억 5000만 원 증액한 1849억 5000만 원입니다.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43억 증액한 155억 38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600억 원 감액한 1조 9410억 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12억 8600만 원 증액한 5237억 6400만 원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4400억 원 감액한 4조 9807억 4700만 원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은 226억 원 감액한 1조 8500억 7200만 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200억 증액한 2156억 6600만 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은 615억 원 증액한 1조 1544억 9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트북의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차관님, 2025년도 2회 추경에 20조 2500억을 증액하고 5조 2722억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순증액 규모는 14조 9283억인데 전체 부처를 제가 보니까 17개 부처 중에서 순증액 되는, 행정안전부가 10조 9352억, 고용노동부가 1조 5837억, 기획재정부가 1조 2329억, 금융위가 1조 1004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교육부는 2조 4334억 원이 순감액이 됐어요. 증액은 2235억 원에 불과하고 감액은 2조 6569억, 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유일하게 교육부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이 된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기조는 경기회복과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되게 부처별 예산편성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 분야에서 2조 이상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구조상 세입경정을 통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인 제도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 사항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전국의 대학들의 호응도도 높은 이런 RISE 사업 이것 자체도 600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RISE 사업과 관계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RISE 사업에서 글로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RISE를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면서 성과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재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당부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감액한 사업은 올해 RISE 지원사업 중에서 성과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글로벌 대학 사업 중에서 연부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성과 관리하고 난 다음에 재원을, 금년에 감축해서 배분하고 있는 재원은 금년은 600억이 감축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팀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억 감축된 것은 사업 자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 내에서 저희가 재원 조정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학에 1000억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3개 연도에 전부 완성이 됐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5년 완성입니다.

○**김대식 위원** 30개 대학이 전체 정해졌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3차 연도에 지원하는 대학은 지금 예비지정만 해 놓고 본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지정은 언제 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본지정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9월경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권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좋은 교육사업 이것은 평가를 해 보고 좋다 그러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을 해 놓고 평가를 그래도 최소한 한 3~4년은 줘야 되는데 1~2년 만에 평가 준비하다가 평가받고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평가서가 먼저 나오게 돼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우리 RISE를 통한 글로벌대학의 지원체계는 5년간의 준비 과정을 전반적으로 성과 관리를 명확하게 해 봤고요. 거기에서 1차 연도의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우선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5년간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1차 연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체계하고는 달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어요.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A·B·C를 나눠서 C 부분에는 조금 감액을 해 가지고 A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지 B랑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2년 차를 보니까 국립대학 부분이 C등급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차별해서 지불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번에는 국립대학, 사립대학과 관계없이 글로벌대학의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평가한 것 중에서 일부 1차 연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의 통합이나 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재원의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A·B등급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국립대학 중심으로 해서 C등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C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좀 차별을 둬니까, 지원 금액에 있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1차 연도에 감액한 재원 중의 일부를 상위 등급에 배분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재원이 지금 600억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600억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대학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지원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게 1차 연도, 2차 연도하고 매우 다르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5년간의 재정 지원이 1000억입니다, 팀당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연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연도 계획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평가의 달성 여부를 계산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얼마가 감액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당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기준에 따른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평가해야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1·2년 차 준비기간 중에 평가를 나와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다 이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1차 연도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준비를 하는 과정인 상황에서 과도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 준비에 차질을 가지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김문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이 비슷한……

○**김준혁 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세요?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 하시고, 강경숙 위원님 하시고, 김준혁 위원님 하시고, 김민전 위원님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대처를 교육부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2.4조 원 감액을 하고 그중에서 교부금이 2조 감액인데 행안부는 교부세액 감액이 없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사실은 똑같이 연동된 건데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을 안 하고 교육부만 하는 거잖아요. 행안부는 돈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달리 적용을 하고 우리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도를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입경정을 통해서 감축을 하든 아니면 차차년도에 정산을 하든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제도인데요.

○**김문수 위원** 그런데 행안부도 똑같은데 왜 행안부는 그러면 감액을 안 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감액할 때도 일부를 감액하고 나머지를 불용시키는 체계로 했던 것처럼 금년의 경우에는……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행안부나 우리나라 교부세 주는 방식이 똑같이 때문에. 왜 그런데 행안부는, 법에도 보면 부대조건에 2년간 이것을 유예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행안부는 적용을 한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게 차차년도 정산 규정입니다.

○**김문수 위원** 교육부는 이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돈이 남아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안정화기금도 보면 23년 말에 9조 원에서 올해 초 3.5조 원으로 기금도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왜 이것을 철저하게 대처

하지 않아 가지고 행안부처럼 해내지 못했나 이겁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는 금년에 세입경정을 통해서 감축하느냐 아니면 차차년도에 정산하느냐의 문제는 재정 운용상의 선택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세입경정을 택했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재원들 중에서 소비쿠폰 등 지방재정을 매칭하는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직접 소요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서는 금년에 우선 지출하고 차차년도에 정산하는 제도를 택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저희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 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지금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문해 보겠고요. 교육부와 또 교육부 관계자, 차관님 모두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2차 추경에서 교육 교부금이 2조가량이나 감액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논리를 보니까 2차 추경에서의 감액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여유가 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네요.

차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재정 여건상,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금년에 세입경정을 통해서 감축을 하든 아니면 차차년도에 정상화를 하든 그것은 필수적으로 감액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강경숙 위원**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 연속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지방교부세는 유지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의 대응 투자 그런 논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하간 중요한 것은 3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것을 좀 감안하셔서 뭔가 대응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부총리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힘의 논리만 생각을 하고 기재부에서 하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수긍을 했습니까? 어떤 논리로 이것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겁니까? 그래도 뭔가 주장을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무 부처이고 책임 부처인데 뭔가 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재정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선택은 금년에 세입경정을 선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세입 감소로 할 때는 일부 정산 재원을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일부 정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원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우리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을 통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기는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김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감액이 있을 때는 그해에 2조씩 이렇게 폭력적으로 꺾꽂이 삭감해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 이후 회계연도에 돌려서 이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 그냥 수궁을 해 버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었는지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관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초부터 시도교육청과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연초부터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작년에도 교부금이 그 연도에 미교부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교육위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유사한 방식으로 또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교육청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안정화기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해 놓는 것인데 그것까지 지금 현재 써야 할 돈으로 다 끌어 쓰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까지를 끌어다 쓴다는 시도도 있어요. 그리고 시도마다 굉장히 격차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메꾸기가 되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올해 말에는 고등교육특별회계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일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 보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 때문에 초중등 예산을 여기다 끌어서 쓴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어쨌건 그런 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한 것은 맞기는 하지요. 저도 고등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미래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교육과 연구에 대한 환경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만 이게 무슨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끌어다가 또 다른 분야에 메꾸는 이런 내부 돌려막기 형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보통합도 지금 첫걸음을 뗐지만 제대로 된 예산이 정착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다음



단계를 밟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 감안하셔야 되고, 실제로 동시다발적으로 유아 초중등 고등 모두 다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위기 대처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지 예산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이라든지, 위기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마련하셔야 되고,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차기에 장관님에게도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또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차관님,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산편성 그것은 정부인데 정부 중에서 재정당국이 최종……

○**김준혁 위원** 아니, 교육부 안에서 협의의 최종 결정자가 장관님인가요, 차관님인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당연히 기관장인 장관이십니다.

○**김준혁 위원** 장관님이 당연히 결정권자인데 오늘 보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관님으로 돼 있네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보고자이기 때문에 제가……

○**김준혁 위원** 아니, 보고자이기 때문에 차관님으로 돼 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장관님이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 보고에서는 당연히 장관이 보고하는 것이고 대독을 차관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1년밖에 안 해서 그 전례를 잘 모르기는 합니까마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관례가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여쭙보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할 때 대독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게 정상인 것이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과 강경숙 위원님께서 ‘왜 행안부는 예산 삭감이 안 됐는데 왜 교육부는 예산 삭감이 됐느냐?’, 물론 교육부의 논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이 하나의 보고서에도 장관 이름이 없는데 장관이 나오지도 않고 결국은 이 관련해서 이주호 장관의 대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장관이 관심이 없고 장관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나는 나갈 사람이니까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하니까 교육부차관님 이하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것이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영상자료도 준비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뉴스에 나온 것 아시겠지만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서 40년 넘어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다니는 일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활밀착형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거의 2조 가까이 삭감이 되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경제성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정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어려운 학생들 이게 다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되는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이 앞서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도교육청에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일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금 갖고 다 쓸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시도교육청 중에 다섯 곳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경 하기 위해서 특별히 돈을 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갖다 빌린다고 다 빌릴 수 있나요? 못 빌리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준혁 위원** 왜 못 빌립니까? 시도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시도의회 인증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도움 달라, 기채를 발행하겠다, 채권 발행하겠다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시도의회가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채권 발행해 줄 수 없다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선 재정구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다음 금년의 재정에……

○**김준혁 위원** 재정구조는 우리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정구조와 관련해서 기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바로 지방채 발행이 시도의회가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지방채 발행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교육부가 그것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현재의 제도 범위 내에서, 우선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릴 부분은 금년에 삭감되거나 아니면 차차년에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삭감하는 상황에서 금년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원을 확충해 가지고 학교 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인데,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제도적으로는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이양을 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방 내에서, 지방교육자치니까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지방의회와의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하고 저희도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혁 위원** 차관님, 하여튼 여러 상황들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경제적 여건 또 내국세 감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어쨌든 저희도 이번에 정

권교체되면서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육부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야 위원들 다 협력해서, 그래서 결국 세수도 확보하고 그래야지 우리 교육현장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꼭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혁 위원님께서 지금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셨는데요. 지금 이 엄중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은 더 이상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교육부장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달라라는 교육위원장의 당부의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차례인데요 제가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손 드신 차례로 지금 배정하다 보니까 김민전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님 이렇게 순서를, 박성준 위원님이 0.1초 빠르셨어요. 그러면 박성준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진선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저는 지금 앞까지의 질의를 들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라고 하면 추경안을 받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아니, 교육부 예산만 이렇게 자르는 것을 보니 그동안에 교육부의 권한과 기능을 대거 축소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더니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고 ‘그게 여당의 방침인가?’ 하고 왔는데 오히려 막 화들을 내시는 것을 보니까 ‘헛소문인가?’ 하는 생각도 또 여기 이 자리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는 공식적으로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축소된 내용 가운데에서, 이미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RISE 사업의 경우에 600억이 성과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 자체에 미치는 아무런 사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대학 총장들의 세미나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보니까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이 지속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마침 예산이 RISE와 상당히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한 대학에 3000억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10개에 약 3조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는 예상

들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지원받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좋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립대들이 경쟁력이 있는 사립대도 있을 수 있는데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반으로 보면 지방의 지방대학 그리고 지방 살리기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드리 갖고 만들어 왔던 RISE와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지방 중심으로의 대학 지원체계를 저희가 마련한 것이고요. 그 범주 내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 지역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브랜드로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살리기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거나 하는 것으로의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저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각 지역마다 아주 좋은 국립대들이, 서울의 사립대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국립대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거 서울로 올라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RISE와 또 이 예산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육부가 지금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의 예산이 무한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RISE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이걸 다시 말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사립대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당께서도 또 교육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민전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짧은데요.

앞에서 교육 교부금에 대한 얘기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이미 우리 앞에 여당 위원님께서도 자료화면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노후 교사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50%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인지 서울교육청에서 건축물과 공조 등을 빅데이터와 IoT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마침 또 교육부가 연구기획을 주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기획을 좀 주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우선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 경정으로 삭감되는 것하고 고등교육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는 상황이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재난 특교가 줄어드는 것도 결국 법정으로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잘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예산 문제는 조금 이따 여쭙보기로 하고, 최근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에 있었던 브니엘예술고 학생 세 명이 동반 투신자살을 한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은 그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조문 가는 것조차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학내의 문제와 관련된 건지 학생들 개인의 문제였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수사 상황을 조금 알고는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심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는 사실확인 단계를 저희가 거치고 있고요. 그것을 하면서 우선 그 이후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나 또는 책임을 져야 될 영역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고 또 학생이 세 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겪고 있는 트라우마, 고통 그리고 이 사건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함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생과 가족들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교육부나 부산교육청과 함께 심도 깊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를 위한 여러 가지 안건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안질의로도 했었고 한테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선후를 분간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6개월간 일어난 주요한 교육 현장의 사건 사고만 하더라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2월이지요. 또 2월에 초등생 투신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는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4월에는 고교생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5월에는, 충격적이지요. 청양고등학교의 4년에 걸친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5월에 제주도 교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5월에 학생 사칭 SNS 피해 사건이 있었어요. 6월에는 고교생 동반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같은 6월, 그 며칠 뒤지요. 울산 여교사 성추행 혐의도 있었지요. 그다음에 또 제주도 어느 교사의 폭언이 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지난 6개월 안에도 이렇게 엄청난 우리 사회가 들쭉 들쭉하고 교육 현장이 전부 다 공포와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총체적인 교육 현장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되고 진단과 해결을 위한 모색에 사활을 걸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의혹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실체도 불분명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현안질의에다가 청문회에다가 굉장히, 이게 무엇을 목적으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교육 주체들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선후를 분간을 못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라도 또 여기 계시는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라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사고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관리해 갈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조정훈 간사님이 서지영 위원님의 의견을 잘 기획해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 안전 문제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자리는 그대로인데 자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야당 위원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목소리에 더 경청하시고 그리고 교육은 교육만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약간 공감하는 눈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왜 나를 쳐다보고 얘기해.

○정성국 위원 좋아서.

(웃음소리)

잘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이번에 국립대학 시설 확충 추경안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제가 보니까 보수 사업이 51.5%가 증액이고 의대교육 개선이 삭감이네요? 완전 삭감이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대학시설 보수 사업은 1957억 원 증액, 이게 더 주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이 1342억 원 감액, 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9개 대학교 의대 정원 규모를 향후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그런 취지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 경북대학교를 갔었어요. 민주당 위원님들도 여러 분 같이 가셨는데 그 시설 보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의대 정원 규모와 관계없이 경북대학교의 시설은 정말 참담하다 싶을 정도로 여야 교육위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시설에서 경북대학교 의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정말 바뀌어야 된다.

혹시 저희 국정감사 때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받았습니다.

○**정성국 위원** 보고받았는데 이것 지금 재논의한다는 이유로 다시 예산 확충을 미루겠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북대라든지 많은 대학들의 노후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의대 관련된 부분들? 의대는 또 비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크고, 기계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러면 또 요원한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실제 지금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현장이 이렇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번에 1344억을 감액한 것은 신설 비용입니다. 신설 비용인데, 신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신설은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원 규모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거라 불가피하게 이번에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들, 추가 정원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현재 의대 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지금 직접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는 시설의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일단 대학들에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수 사업.

이 부분은 이렇게 증액을 막 하는데 의대 관련된 그런 사항들, 그때 국정감사 때 분명히 우리가 현장 답사까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집중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야가 다 공감했잖아요. 박성준 위원도 그때 같이 있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의대가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책정된다는지 고려가 되는 게 없이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직접 필요한 요소, 즉 국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시설개선 사업에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부분은 저희가 정부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는 전체 국립대학교 37개교에 평균 53억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의대의 노후시설, 의대 노후시설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인력들을 양성하는 곳에서 첨단시설이라든지 현대화된 시설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부에 우리가 그때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사실상. 국정감사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그때 지적하는가보다 싶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경북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정말 진솔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관님,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말씀드렸듯이 20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자를, 의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정 변경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추경의 목적과 편성 방향에 맞게 국립대학 전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부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니까요 심의 과정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적극 긍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대 살리기와 관련된 질의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추경이기 때문에 한 번 언급하고 지나갈 이슈가 아니고 인구 위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저는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글로컬이라든지 RISE라든지 이런 시도는 했지만 문제인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도 모든 정부들이 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정책 예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짓이기는 한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동안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10조 원이 넘는다 이래요.

그런데 차관님 오랫동안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지방대가 그만큼 살아났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우선은 지방대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여력으로 볼 때 지방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투입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고민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된다고 보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재정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별 사업을 하면서 판단을 해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얼마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고 그 제도에 부합되게 재정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RIS에서 출발해서 RISE로 가고 지금 RISE와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법안에서 저희가 상의를 드렸던 것처럼, 제도화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중심으로의 재정 투자 방식 그리고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부합되게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연결시켜서, 이것은 단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논의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드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우리가 출생과 관련된 정책도 재원을 계속해서 많이 투여는 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둘이 결혼했는데 한 명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지방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 수도권도 좀 살 수 있고 지방도 살 수 있고, 그래야 경쟁체제도 없어지고, 그래야 출생률도 올라간다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마치 다 나눠 먹기식 하는 것처럼 그냥 찔끔찔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은 줘야지, 여기 이만큼 줬으니까 저기도 이만큼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에 그야말로 완전히 몰빵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다 너무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저는 좀 있거든요.

제가 글로컬이나 RISE에 대한 미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대 살리기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면 협업 구조가 마련돼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매우 어렵게 중앙정부의 특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일이 제도적 변화로서의 RISE 체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돈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원들 중에서 합리적인 방안

으로 배분을 해서 진행하되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없으면 그게 지금까지 정도 수준의 유지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RISE 체계를 통해서 집중적인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1단계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발전적인 견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게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차관님, RISE를 하더라도 국공립대가 있고 사립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또 다 나눠 줘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RISE 체계 내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의 중점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인재 양성 그다음에 지산학연 그다음에 직업고등교육 현안 문제……

○**고민정 위원** 그 내용들은 굳이 설명 안 주셔도……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사립 국립과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차관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의견은 알겠고 저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거기 강하게 있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교육부에 계속 계실 분들이니까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마지막으로 이배용 위원장님께서서는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의장이셨으니까 지방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지방대 살리기의 발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저희 본위원회에서도 아주 상당히 상세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저희가 앞으로 종합계획, 발전계획에 여러 가지 정황이 또 대책이 잘 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만 지방대 관련된 것만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지방대학의 정원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가 수도권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이 좀 담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가장 많이 삭감된 부처가 교육부지요.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일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전 국민 지원금 주겠다고 부처에서 다 돈 짹 짹 짜내 가지고 30조 만든 거예요. 20조 빚냈지요. 그리고 10조 어디서 다 짜내 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교육부가 지금 2조 이상 제일 많이 깎았어요.

저희 상임위 하면서 계속 교육 예산만큼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민주당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집권하시고 추경 딱 하는데 어떻게 교육 예산 이렇게 제일 많이 깎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육부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재부에서 내려왔겠지요. 할당이 왔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제도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감축하느냐 아니면 2년 후에……

○**조정훈 위원** 교부금 빼고, 교부금 빼고 일반예산 삭감은?

○**교육부차관 오석환** 일반예산에서는 개별 사업별로는 불용되는 불가피한 조정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조정훈 위원** 불용되는 불가피함 이것은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한 만큼 따끔하게 지적하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30조에 20조 빚내고 10조 짜내 가지고 15만 원 전 국민 소비쿠폰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조. 여러분, 20조의 빚을 내려면 전 국민으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45만 원이에요. 문정복 간사님, 저, 고민정 위원님 다 45만 원씩 내고요. 15만 원씩 다 나눠 갖자는 거예요. 45만 원씩 더 세금 내고 15만 원 나눠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불용이라 그러셨지요. 저는 이 항목을 자세히 보면서 백번 양보해서 교부금은 포물러로 움직이니깐 양보한다고 쳐요. 그 2조도 아깝지만 김문수 위원님 말한 것처럼 유예기간 있는데 그것 안 쓴 것도 굉장히 나는 불만이지만, 여기 보시면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건 아니라 생각해요.

국가장학금 이게 2종 예산인데 학생들 근로장학금 이런 걸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근로장학생 해 가지고 주는 건데 그 돈 없어서, 그 돈 뺏아서 대학생한테 공짜로 15만 원 20만 원 주겠다 이겁니다. ‘근로장학금 예산 줄 것 없는데, 그냥 돈 그대로 줄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방법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예산은 없고 그냥 받아 가라 이겁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교육적이에요? 아무리 보편예산이 좋아도 보편복지가 좋아도 학생들 근로장학금 예산 4000억을 다 깎아서 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고요? 이게 정말 무슨 짓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어요? 4400억 예산 삭감한 것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근로장학생 예산 깎아서 애들 그냥 주겠다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이니깐 좀 상세하게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쪽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근로장학금은 저희가 이번에 실질 집행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실질 집행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직 2학기도 시작 안 했는데 실질 집행이 좀 미진

할 것 같아서 그 금액을 깎겠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1학기에 편성한 것을 보면 2학기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조정하지 아니하고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조정훈 위원** 1학기 때도 학생들이 근로장학금 신청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각 대학들에서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예산 다 깎아 버리면 근로장학생 할 수 있는 기회는 2학기 때 훨씬 더 줄어요. 그게 4400억이에요. 그래 놓고 ‘그래 미안하다, 이제 소비쿠폰 줄 테니까 15만 원 20만 원씩 받아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도 됩니까? 이걸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의 정신들이, 전 국민에게 ‘45만 원 세금 더 내고 15만 원 줄게, 좋아해라’, 이것은 저는 백번 양보해서 교육위 책임 아니라고 치고 제가 예결위 가서 단호하게 따질 겁니다.

그런데 교육위 예산 짜내는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고 정말 너무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 근로장학생 예산까지 탈탈 털어서 뭐 증액했는지 아세요? 국립대학 시설 확충했어요, 민생 경기 확대한다고. 내용을 보니까 에어컨 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개선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교육부가 이걸 동의해요?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어컨 시설 개선하고 화장실 개선하겠다고요? 이래 가지고 민생 경제 살리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건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가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선 근로장학금을 포함한 국가장학금에서 실질적인 사업 규모를 줄여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저희가 약속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편성을 해 왔던 재원들 중에서 운영 과정에서 명확하게 불용이 전망되는 것에 대한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장학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과정상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1000억 정도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지난번에 국가장학금 중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1300억을 삭감한 내용들은 등록금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질 수요에 대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즉 등록금을 올리지 아니한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2배 정도 수준으로 실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적인 조정은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위원** 하여튼 예결소위에서 또 논의하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국민의 어려운 여건에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 예산 때문에 우리 교육부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훈 간사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심성 예산을 추가하면서 교육 예산의 장학금 예산을 깎았다 그러면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특히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쓰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좋게 생각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교육부, 우리 아이들의 예산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데 쓰는 예산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잘 걸러내서 그런 예산 잘 아껴서 지금 부족한 교육 예산으로 좀 충당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야당하고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당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인제는 어디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기예요, 안정기예요, 아니면 하락기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안정기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의하는 것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교육 예산을 볼 때 저희가 바라보는 국가발전전략에 맞춰서 교육정책을 짜고 교육정책에 따라서 교육재정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경제가 상당히 하락기였고 경제 성장동력이 멈췄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의 성장동력이 없다 보니까 세수가 확충이 안 되는 거예요.

원가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수에 대한 조정을 통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 추가경정예산도 그러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기 시고, 안정기일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다 나눠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가 성장기고 안정기일 때는 다 두루두루 나눠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락기이고 세수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일반예산 편성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항상 편성하는 과정인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가 전체의 추경예산 편성은 지금의 편성 방향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예산편성 과정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듯이 초·중등교육에서의 재정투자가 요구가 되는데 그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초·중등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려면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도와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고등교육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재 양성을 통해서 국가발전전략을 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저희 교육부는 명확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국가가 지금 위기 시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살리는 쪽에서의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의 재정 투입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가운데 각 정부 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후에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겠지만 그러면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부흥하고 새로운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 R&D 쪽에서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예산에 대한 투입, 그런 가운데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그것이 기본적인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국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차관님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차원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국가는 지금 위기 시고 위기에 맞게 재정 투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앞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걸로 나오는데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세수도 어렵고 설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에 대한 것들 할 때 저는 장기적인 5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AI, 바이오, 콘텐츠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육에 대한 것, 초중등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서 5년간 준비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과 인재 양성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맞춰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과거처럼 그냥 안정기에 예산을 배분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가 설계로서 생각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국가발전전략에 맞춰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가 우리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 면에서 보면 새로운 미래세대가 살아갈 때 필요한 기반인 유초중등교육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분야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에 관한 논의 그다음에 고등교육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논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5년간 발굴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걸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의 편성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국정과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준 위원 오늘 이 추가경정예산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수가 안 걷히는데 어디다 돈을 내겠습니까? 세수 걷히게 되면 경제성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 삭감 한 2조 4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참 어려운 과정이 있구나, 이것이 현실이구나라는 걸 좀 봐서, 이걸 빨리 모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집권 여당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빠져리게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아 위원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9조 추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일인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손실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금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당선사례금이라는 등 하는 비난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으로 교부금이 2조 원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안정화기금이 있다는 생각하에 교육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안정화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많고 또 어떤 해에는 적은 이 재정수입 불균형을 보완하는 제도인데 약간 남은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다 지방교육채 계속 발행해 왔어요. 21년 22년 단 두 해에만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안정화기금을 모아 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머지 해에는 늘 모자랐다, 늘 지방교육채 발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들 다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교부금, 세입예산 다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99% 삭감했지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대규모 재정 투입되는 국고사업, 국가사업인데 다 교부금으로 떠넘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다, 3년 연속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지방교육재정 특수성 감안해서 학생 중심 교육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원칙을 좀 세우고 교육부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강하게 우리 교육 예산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3년 연속으로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려운 재정 여건인 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서 교육 교부금 증액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오늘 리박스쿨 사태 우리 안전으로 또 올라온 게 있는데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극우 뉴라이트 세력의 공교육 침투 시도가 리박스쿨 사태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추가로 드러난 것이 뉴라이트 세력이 일본 식민사관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직접 제작하려고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집필진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 인사들이 들어가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충암고 동문이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인 김낙년 교수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뉴라이트 검정교과서 현안질의 때도 이 뉴라이트 검정교과서 제작하려는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요. 또 우리 위원회가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리박스쿨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4월에 감사원 결과가 나왔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감사원이 교육부의 출판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1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검정합격취소 통보됐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감사 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난 6월 13일 날 처분심의 위원회를 하고 지금 합격취소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이게 절차가 있어서 청문 실시를 하고 청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7월 중에는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 통지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청문회, 그러니까 검정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확정이 됐고 청문회 끝나고 이렇게 처분한다는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행 내역들 조치 결과들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상의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자는 이주호 장관 아니겠습니까? 주무 장관이고 누구보다 극우 뉴라이트 공교육 침투의 배후 세력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분인데 지난번 리박스쿨 현안질의 때도 불출석하셨고요. 청문계획서 채택하는 오늘도 청문회 채택하는데 이때도 또 지금 불출석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리박스쿨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께서 반드시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뉴라이트 세력의 공교육 훼손에 대한 사실, 책임 다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주호 장관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꼭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앞에서도 얘기하신 두 가지 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예결소위 위원이기도 해서 그때 얘기해도 되지만 그건 기본이고 전체회



의에 좀 의견을 남기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지방교부금 관련해서 저는 이게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수 감소로 인한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적어도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늘 세수 부족하면 줄였다 원상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세수경정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세입경정 하더라도 부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의대 관련해서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교육위에서라도 적어도 리모델링 부분이라도 증액을 해서 그것이 예결위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 주시고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신축 관련해 가지고 턴키 방식 주장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 보란듯이 모든 금액이 다 깎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2000명은 증원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1500명.

○**진선미 위원** 맞아요. 1500명 증원된 상태이고 그리고 계속 의대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 복귀를 독려하고 전공의도 현장에 복귀하기를 독려하려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의대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개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불뚝 다 깎아버리는 상태로 정리하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 반영 과정에서 좀 변형될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게 국립대 안에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대로. 그러면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신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저희가 그래서 수요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게 약 290억 원 정도면 내년 12월에 해 가지고 2월 달까지 뭔가를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의대 쪽에서 얘기하고 계신데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논의하면서 받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차감할 때 수요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의대 각각의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성국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경북대에서 그렇게 국감 때도 확인된 건데 신설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에 의대생들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인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 포기 안 합니다.

○진선미 위원 포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설과 관련돼 있는 거는 기획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말씀 주시는 대로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추경 편성의 방향에 부합되지 아니하여서……

○진선미 위원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2026년도 예산 반영에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진선미 위원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당연히 그 논의들을 지금 추경하고, 단계가 지금 현재의 추경 그다음에 2026년 본예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의대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적합할 것인지 고심을 해 가지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진선미 위원 이번 예산으로 해 가지고 2월 달에, 3월 전에 뭔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은 그다음부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행히 추경이 시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일단 교육 예산이 마이너스, 2조가 깎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세수가 결손이 10조 이상 날 거라는 것 때문에 이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 다 불용처리돼서 연말에 흑여라도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줄어들까 봐 한 교육지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통교부금이 그렇게 깎여 버리니까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는 굉장한 예산난에 허덕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 본 게, 정책위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조율을 해 본 게 뭐냐면 그렇다면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무엇일까라고 그 논의를 했고 그중에서 지난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로 9800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으로 저희가 목적예비비에 담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를 풀지 않고 그냥 보통교부금에서 시도교육청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예비

비 9800억 중에 6개월분, 7월부터 해서 6개월분 4900억 원을 이번에 풀어서 시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아마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당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당장 30일날 교육재정교부금법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이 법안이 7월 3일 통과되면 바로 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나머지 하반기에 대한 49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지난번 목적예비비에다가 만 3~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2800억 원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 놔는데 이것을 6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나머지 하반기 6개월분을 배정을 하되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얼마냐면, 그 금액과 그다음에 보육료 인상분, 저희가 매년 5%를 인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 인상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은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운영비난 때문에 보육시설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합쳐서 2410억 원을 만 5세 무상교육 2800억 꼬리표 달아 놓은 것에서 그것을 갈라서 그렇게 부담하기로 했다고 저희가 정책위와 그다음에 교육부와 기재부가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 3개의 예산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니 이런 것들을 풀어 주면,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교육청 예산에 잡아 놓은 다른 예산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의 부모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것은 교육부가 꼭 책임을 저서, 기재부하고 협상은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교육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장이시니까 이것은 저희 교육위 예결위에서 반드시 부기로라도 달아서 예결산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조정훈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조정훈 위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교육부도 꼭 명심하셔서 이 예산 꼭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문정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조정훈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11시27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역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 3.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3항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의 불법 댓글 조작, 위장 단체 침투 의혹, 교육부 및 유관기관의 연루 의혹, 이주호 장관의 책임 규명 등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 불안·불신 해소를 위해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청문회는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해 발언하거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잘 합의를 해 주셨지요?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리박스쿨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1시28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4항 리박스쿨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청문회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33개 기관 대상 342건입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5항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5명입니다.

증인의 성명, 신문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 출석요구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증인 다섯 분은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하신 증인입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꼭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서면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문정복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증인 명단

증인(5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이주호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서 리박스쿨 사태를 촉발시킨 경위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수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교육부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며 리박스쿨 관련 인사를 다수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 다수 피력, 리박스쿨 강사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위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식 회의에서 극우보수 교육을 위한 의견 다수 피력한 경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늘봄학교 강사 민간 자격증 부실 발급 및 댓글조작팀 활동 유도 문단과 초등학생 대상 역사왜곡, 개신교 세뇌교육 및 집회동원 경위

## ○출석 위원(15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진선미

○청가 위원(1인)

정을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오석환

차관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 구연희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최수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6)

6월 12일 회부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0)

6월 13일 회부됨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2)

6월 16일 회부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8)

6월 17일 회부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6)

6월 19일 회부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1)

이상 2건 6월 2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공포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2025. 6. 20.	36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61